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 2022.9.8(금) ~ 2022.9.15(수)

제공일시 2022 09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2.9.8(금) ~ 2022.9.15(수)

제공일시 2022 09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러시아 가스 가격상한제 합의 불발... 오스트리아 등 반대/“상상도 못한 매출”... EU, 발전사에 ‘횡재세’ 물린다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가스 도입가격에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
- 이는 일부 국가가 러시아산 가스가 완전히 끊길 것을 우려하면서 분열했기 때문인데, EU의 러시아산 가스 가격상한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국가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로 구성된 발트 3국인 반면, 러시아로부터 많은 가스를 수입하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는 반대 입장을 밝혔음
- 한편,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발전사에 ‘횡재세(windfall taxes)’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음
- EU 집행위는 풍력, 원자력, 화력 등 가스가 아닌 동력으로 전력을 만드는 업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 이번 대책을 추진함

(머니S, 2022.09.11) 송윤정 기자

(한국경제TV, 2022.09.08)

2. EU, 러시아 가스 상한 대신 풍력·태양광·원전 전기 판매가 묶는다

- 유럽연합(EU)이 헝가리 등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가격 상한제 논의를 뒤로 미루는 대신 치솟은 전기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풍력, 태양광, 원자력 발전소의 유럽 내 전기 판매 단가를 묶기로 했음
- 13일(현지시간)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열린 유럽의회에서 “러시아가 가스관(노르트스트림1)을 통해 가스 공급과 가격을 추가 조작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회원국들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음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4일, 높은 전기요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제안할 예정이며 EU 에너지장관들은 오는 30일, 긴급회의 열어 이러한 제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임
- 집행위가 마련한 제안 초안에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석탄 발전소가 EU 지역에서 판매하는 전기의 메가와트시(MWh) 단가를 180유로(25만원)로 묶는 방안도 담겼음

(헤럴드경제, 2022.09.14) 한지숙 기자

3. EU, ‘195조 횡재세’ 구체화... “전력·연료 팔아 ‘기록적 이익’은 잘못”

- 유럽의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고수익을 얻는 발전 기업과 화석연료 사업자로 부터 ‘횡재세’를 징수해 1400억 유로(약 195조원)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함
- 유럽연합이 이날 발표한 제안서에 따르면, 1400억유로 마련 방안은 두 가지인데, 우선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가스보다 낮은 비용으로 발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 사업자의 전력 요금 수입을 1mWh당 180유로(25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이를 초과해서 얻는 이익은 회원국이 해당 회사에서 징수하겠다는 것임
- 또,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사업자는 과거 3년 평균 이익의 20%보다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회원국이 이 중 33%를 연대금으로 징수하는 내용과 피크시간대 에너지 사용량을 5% 감축해 10% 절전 효과를 거두자는 제안도 포함됨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오는 30일 임시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제안서를 검토할 예정임

(한겨레, 2022.09.15) 김미향 기자

1. 美, 바이오도 “자국 생산”... 전기차·반도체 이어 韓 영향 ‘비상’

- 미국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공식화하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이어, 바이오·제약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 내 생산을 연일 앞세우면서 한국 산업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됨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골자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음
- 이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강력한 공급망 구축, 물가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 백악관은 오는 14일 관련 회의를 열어,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을 구체화할 광범위한 신규 투자와 지원을 발표할 예정임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한국 바이오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연합뉴스, 2022.09.13) 이상현 기자

(머니S, 2022.09.13) 지용준 기자

2. 기후위기 우려와 전쟁 영향으로 기후기금 새 계산법 필요”

-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앞두고, 이번 총회 주최국인 이집트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기금의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음
- 이집트의 유엔 고위급 기후 옹호관을 맡은 마흐무드 모히엘딘은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기존의 기후기금 산정 기준이 오래됐고, 예상보다 빨라진 기후 위기와 전쟁 등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이번 총회에서 기후기금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라며 “기후 위기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개도국들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 적응이 가능하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특히, 민간분야 재정 동원, 빈국의 채무 감면, 무상지원 성격의 기금 확대, 아프리카에 특화된 탄소 시장 설립 등을 촉구했음

(연합뉴스, 2022.09.13) 김상훈 기자

3. 바이든 미 대통령,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9억 달러 ‘베팅’... 왜?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 내 35개 주에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데 지원하러 9억달러(한화 약 1조 2550억원)에 달하는 자금 투입을 승인했음
- 15일(한국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자금 승인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며, 정부는 미국 내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2030년까지 미국서 판매되는 신차의 50%를 전기차(BEV)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음
- 이에 더해 원활한 친환경차 운행을 위해, 같은 기간 50만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도 밝힌 바 있음
- 아울러, 지난 8월 통과한 법안은 미국 우정국(USPS)이 더 많은 전기차 및 충전소를 확보할 수 있게 30억달러(약 4조1820억원)를 지원하고 USPS는 전기차 구매 계획을 당초 1만여 대 수준에서 2만 5000대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전했음

(연합뉴스, 2022.09.15) 안효문 기자

1. 美 IRA·유럽 FS 규제… 한국 기업 해외진출 부담 커진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EU의 역외보조금(FS) 규제 등으로 해외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철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뉴시스, 2022.09.14) 이현주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법무법인 세종과 14일 개최한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IRA 영향에 대한 발표를 한 박효민 변호사는 IRA 관련 규정을 '전기차 세액공제', '친환경에너지 및 탄소배출량 감축 관련 세액 공제', '친환경 산업용 부품, 연료, 핵심광물의 국내생산 촉진' 3개 그룹으로 나눠 설명하며, 대미 투자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음
- 윤영원 변호사는 ‘EU 역외보조금(FS) 법안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EU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 모두는 EU 역외보조금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음
- FS 규제는 외국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급 받은 역외 기업이 EU 시장에서 EU 기업의 인수 합병, 투자, 서비스무역, 공공조달 참여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서명 및 EU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예정임

2. 미국 농업청, 기후 친화적 농업 투자 3배 확대

- 미국 농무부가 농업과 임업의 기후피해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에 30억달러 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당초보다 3배 많은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음 (Reuters, 2022.09.15) Leah Douglas 기자
- 농무부는 50개주와 푸에르토리코에 걸쳐 70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토양 탄소흡수를 위한 덮개작물 심기, 베탄배출을 줄이는 비료관리 개선, 친환경 쇠고기 방목관행 데이터 수집 등이 포함됨
- 미 농무부는 지난 2월 ‘기후 스마트 상품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처음 발표한 이후, 200억달러 이상의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1050건의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음
- 이번 계획은 기후 농업 가속화를 위한 바이든 정부의 드라이브임 한편 기상청도 올해말 기후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2차 자금지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음

3. 기후변화·에너지난에 각국 ‘수소정책’ 가속화, 한국 상황은?

- 13일 세계 수소기업 협의체인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에 따르면, 세계 수소 수요는 2030년에 약 1억톤(t), 2050년이 되면 세계 수소 소비량이 5억46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이코리야, 2022.09.13) 윤수은 기자
- 유럽, 미국 등 수소 선도국에서는 수소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함
- 한국은 수소 활용에 쓰이는 연료전지 기술에 강점이 있는 만큼, 연료전지 기술 확보가 중요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됨

4. 생분해 플라스틱 인프라 구축 추진… 화학산업 지원책 연내 마련

- 정부가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증체계와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연합뉴스, 2022.09.14) 권희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14일 ‘2022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콘퍼런스’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음 (뉴스1, 2022.09.14) 임용우 기자
- 산업부는 먼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체계를 마련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폐기물 부담금 면제 등 환경부의 인센티브와 연계해 생분해 플라스틱 분야의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을 밝힘
- 아울러, 기업·지방자치단체와 생분해 플라스틱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바이오가스화와 재활용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모델을 실증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며 ▲석유화학 친환경 전환 ▲정밀화학 고도화 ▲플라스틱 규제대응 등의 내용을 아우르는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임

1. S&P 글로벌,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 측정 발표

- 세계 대기업의 90% 이상이 2050년대까지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크게 노출된 자산을 적어도 1개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S&P글로벌 지수와 평가기관인 S&P글로벌이 목요일 발표했다
-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S&P Global 1200지수로 분류되는 대기업들의 98%가 2090년대에 고도로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 S&P는 대기, 육지, 해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을 시뮬레이션한 기후 모델을 사용하여 2만 개 이상의 기업과 87만 개 이상의 자산 위치에 대한 위험을 평가, 각각 0에서 100까지의 점수를 매겼음
- 2050년대까지 각 기업은 75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이는 극심한 더위, 극한 추위, 산불, 물 스트레스, 가뭄, 연안 홍수, 자갈 홍수, 열대 저기압으로 인해 상당히 높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임

(Reuters, 2022.09.15) Juliette Portala 기자

2. 유나이티드항공, 400대의 전기 항공택시 계약체결

- 유나이티드항공은 4인승 전기항공기 200대와 옵션 200대에 대한 조건부 구매계약과 함께, 엠브레어가 지원하는 전기 수직이착륙항공기(eVTOL) 이브 에어 모빌리티에 1500만달러를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 새로운 전기항공기는 2026년 첫 인도될 것으로 예상됨 이브(Eve)는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레어에 의해 2020년 출시됐으며, 최근 스펙(SPAC)을 통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3억6000만달러를 조달했으며, 엠브레어는 지분 82%를 보유하고 있음
-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번 합의를 통해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상쇄에 의존하지 않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SAF(지속가능항공연료) 투자, 지속가능항 항공 중심의 벤처사인 유나이티드항공 벤처스를 출범했음

(ESG Today, 2022.09.12) Mark Segal 기자

3. 전기차 기업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테슬라의 야심

- 테슬라가 배터리 핵심소재인 리튬 생산부터 대용량 ESS를 활용한 미래 에너지 공급망까지 사업을 급속 확장하고 있음
- 테슬라는 지난 9일 리튬 정제공장 건설 추진을 밝히고, 내부적으로 3분기 ESS 생산목표물량을 2배 가량 확대하고 배터리원자재, 배터리, 전기차 생산까지 수직계열화할 예정임
- CNBC가 보도한 테슬라 내부녹취록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3분기 422개 메가팩을 인도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2분기 대비 85% 증가한 목표라고 함
- 메가팩은 1개가 컨테이너 크기만한 거대 배터리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의 에너지저장장치로 쓰이는데, 테슬라는 메가팩 부피를 타사의 60%수준으로 줄이고 부품 수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계획으로 올 연말까지 예약물량이 꽉 찬 상태로 알려졌음
- 테슬라는 작년 ESS 부문에서만 7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4분기 착공,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에 배터리용 리튬 정제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기도 함

(조선일보, 2022.09.14) 임경업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 2022.9.8(금) ~ 2022.9.15(수)

제공일시 2022 09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녹색금융협의체 새로운 기후 시나리오 발표. 환경단체에 그린워싱 비난받은 EU 그린택소노미

- 116개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회원으로 가입한 녹색금융협의체(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새로운 '기후 시나리오(Climate Scenario)'가 최근 발표됨
- 이전에는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영향을 모델링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 데이터가 포함됐다고 책임투자미디어 RI는 밝힘. 모델링에 따르면, 지난해 기후정상 회담인 COP26에서 약속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따르거나 현재의 정책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가 2.6도 상승한 '온실 세계(hot house world)'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자연재해에 대한 노출은 현재 수준에서 5배 증가할 것이며, 자연재해 중에서도 가뭄과 폭염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또 만성적인 물리적 위험으로 인한 GDP 손실은 2050년에 6% 이상이 되고, 현재 정책 시나리오가 계속되면 세기말까지 최대 18%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함
-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일부 학계의 평가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국가온실 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반면, NGFS의 모델링은 더 비관적임. 이번에 발표된 시나리오는 NGFS가 발표한 6가지 기후 시나리오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 중 가장 상세한 것으로 알려짐
- 또 NGFS는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적응기술의 최신 추세를 통합하고 GDP와 인구 데이터를 업데이트함. 현재의 정책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가 2.6도 상승한 '온실 세계(hot house world)'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이번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후 정책을 조기에, 보다 질서있는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이 2050 이전에 갑작스럽게 기후조치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든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음
- 넷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향후 수십년 동안 상당한 투자가 청정 에너지로 향해야 하는데, 석탄의 경우 에너지믹스에서 2020년 28%에서 2030년 7%, 2050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재생에너지와 바이오매스는 2050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는 전 세계 1차 에너지 수요의 70%를 제공할 전망이다
- 최신 시나리오는 화석연료를 향후 수십년 동안 에너지 믹스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탄소제거 기술에 의존하는 모델링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환경캠페인 그룹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해오고 있음
- 보고서는 "재정 및 통화정책은 NGFS 시나리오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데, 재정 정책의 경우 탄소세 수입을 활용한 공공투자 증가, 민간에 적용되는 세금 인하, 가계로의 이전 증가, 공공부채 상환 등의 4가지 옵션을 보면, 공공투자 증가가 가장 강력한 자극을 준다"고 밝힘
- 한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표기한 택소노미(Taxonomy, 친환경 분류체계)에 대해 메이저 환경단체 두 곳으로부터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고 19일(현지시각) FT가 밝힘
- 대표적인 환경캠페인 단체인 그린피스, 이와는 별도로 클라이언트어스(Client Earth) 및 WWF(세계 야생기금)를 포함한 별도의 환경단체연합은 "EU 기후법과 양립할 수 없는 '가짜 녹색(fake green)' 라벨을 적용한 결정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힘

(임팩트온, 2022.09.15) 박란희 편집장

(임팩트온, 2022.09.19) 박란희 편집장

- EU의 탄소노미는 2050년까지 넷제로, 즉 온실가스 순배출량만큼 이를 거둬들여 제로(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만들어진 '친환경 분류체계'를 가리킴. 당초 EU의 탄소노미에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조건부로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포함시킨 바 있음
- 이에 대해 클라이언트 어스를 포함한 환경단체들은 “유럽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유럽 전역에 높은 에너지가격을 초래한 강력한 화석연료인 천연가스에 녹색 라벨을 붙일 수 없다”며 문제삼고 있음
- 그린피스는 원자력과 관련된 위험요소 때문에 탄소노미를 반대하고 있음. 그린피스의 EU 지속가능 금융 캠페이너인 아리아드나 로드리고(Ariadna Rodrigo)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천연가스는 기후 문제와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인 반면, 원자력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해결책도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의 위험성은 무시할 수 없을만큼 크다”고 밝힘
- 두 환경단체 모두 EU 집행위원회에 16주~22주 가량의 기간을 주고 탄소노미를 공식적으로 재고할 것을 요청했으며,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이번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설명함
- 지난주엔 5개의 비영리단체가 탄소노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EU 집행위원회에 기술적 조언을 해주는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EU 플랫폼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함
-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도 지난 7월 유럽의회 이의신청에 대한 마지막 표결이 부결되면서, 새해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절차를 밟고 있다. 원자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오스트리아가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초쯤 관련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임